

# 북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097호 2022. 6. 30. (목)

## 공 포

규칙 제971호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 발 령

훈령 제340호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 ---6

훈령 제341호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15

공										
람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2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북구규칙제971호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고충민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고충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충민원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고충민원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권리보호 요청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외국인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권리보호 대상	① 요청기관	② 세무조사	③ 세정행정	④ 체납처분

⑤ 권리보호 요청내용	※ 작성할 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합니다.
-------------	---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위임장

위 신청인 본인은 아래의 위임받은 자에게 권리보호 요청의 신청을 위임합니다.

위임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임받은 자 (서명 또는 인)

위임 받은 자	성명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⑥ 첨부 서류	1. 사전통지서 등 받은 서류 2. 권리보호 요청 내용을 증명하거나 보완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위임자)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 80g/㎡)

■ 제·개정(폐지) 이유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알아보기 쉽고 작성하기 간편한 민원서식으로 정비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별지 제1호서식 「고충민원 신청서」와 별지 제20호서식 「권리보호요청 신청서」의 디자인 재설계 및 민원인 작성항목 최소화 등 서식 정비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2022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북구훈령제340호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부개정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등)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예방을 최우선으로 한다.

② 근로자를 관리·감독하는 해당 부서의 장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산업재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사업장에서의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하여 공동책임을 지고, 안전수칙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안전·보건기준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경영방침의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사업장내 모든 구성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조직) ① 구청장은 안전보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조직을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직책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장비·예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구청장은 총무국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선임하고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자) 구청장은 직무와 관련된 소관업무와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고 법 제16조제1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자)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영 제1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보건관리자)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기 위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산업보건의) 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두고, 영 제3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하거나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에는 산업보건의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제3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같은 수로 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사용자 위원

가. 사용자대표: 인사·노무업무 총괄 국장

나. 사용자대표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사업부서의 장

다. 안전관리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 1명

라. 보건관리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보건관리전문기관의 담당자) 1명

## 2. 근로자 위원

가. 근로자대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하며,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4명 이내의 근로자

②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일 경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회의 : 분기 1회

2. 임시회의 :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노·사 일방의 요구 시 10일 이내 개최

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 시

② 위원회의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대재해예방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18조(참고인의 출석) ① 노·사 양측은 필요 시 참고인의 출석을 위원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안전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고인을 출석시켜 진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석을 요청받은 참고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보고·진술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작성 및 회의결과 보고 등) 위원회는 영 제37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근로자에게 주지하여야 한다.



## 제4장 안전보건교육

제20조(정기 안전보건교육) ① 관리책임자는 법정 정기안전보건교육 의무 실시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②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해당 부서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근로자는 정기 안전보건교육에 참석하여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신규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관리감독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에 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특별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기록·보존)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 또는 교육결과 보고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에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장 안전관리

제24조(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설과 장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직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안전확보를 위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5. 비상사태별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

6.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25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진단)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계획 및 실적
  2.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유해요인제거 및 시설물의 정기점검
  4. 안전교육훈련
  5. 사고원인조사 및 그 대책수립
  6.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8. 안전관련 서류의 기록 및 보존
  9. 안전표지·안전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 ② 안전관리자는 안전진단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작업중지) ① 구청장은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작업 중지조치를 즉각 이행하여 재해예방 및 재해확산방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방호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영 별표 20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방호조치를 한 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방호조치를 임의로 해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안전순찰)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근로상태, 작업환경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순찰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장의 안전조치)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업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작업규율의 확립 여부
2. 작업계획 수립의 적정 여부
3. 작업배분 및 공정관리의 적정 여부

4. 작업용구 및 안전장구의 적정 여부
5. 그 밖의 안전한 작업에 필요한 사항

제31조(안전수칙) ① 관리감독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안전수칙을 제정·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32조(종사자 의견 청취)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법 제64조 및 제75조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제33조(안전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6장 보건관리

제34조(근로자 건강진단 등) ① 관리책임자는 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 변경, 작업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건강진단의 종류·시기·주기·항목 등 건강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35조(작업환경측정) ① 관리책임자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 및 세부사항 등은 규칙 제186조부터 제190조까지에 따른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점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 외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뜻을 나타낸 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7조(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등) ① 관리감독자는 규칙 제141조에서 정하는 분류기준에 따라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 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취급할 경우, 규칙 제167조에 따라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규칙 제169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대상 화학물질을 담은 저장 용기 및 포장에 영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영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근골격계 질환 예방) ① 관리감독자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반복작업,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해 작업환경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시작 전이나 작업 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며, 치료를 마치고 작업에 복귀할 경우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다른 작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39조(기타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0조(보건수칙)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건강상 필요한 작업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보건수칙을 제정·게시하고 근로자는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보호구) ① 관리감독자는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작업상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구청장은 규칙 제2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보건기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건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7장 위험성평가

제44조(위험성평가 실시) ① 관리책임자는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③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및 결과와 조치사항 등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 제8장 도급·용역·위탁시 안전관리

제45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46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 구청장은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관련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47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구청장은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한다.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영 제5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제9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48조(긴급조치, 사고조사 및 보고) ① 근로자가 안전사고 등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있는 근로자 등은 즉시 병원 응급실 또는 치료실로 후송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사고 등 재해발생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즉시 병원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해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안전관리자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는 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에 따라 사고조사를 하고,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안전관리자는 규칙 제67조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재해분석 및 대책) 관리책임자는 발생한 재해 현황에 대하여 재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 제10장 보칙

제50조(무재해운동) 관리책임자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사고 예방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고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무재해운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1조(서류의 보존) 구청장은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서류를 법 제164조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52조(시행세칙) 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개정(폐지) 이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추가·보완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관련 내용 추가  
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규정된 안전보건 관련 내용 추가 반영 및 보완

## 발령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2022년 6월 30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부산광역시북구훈령제341호

####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기관별 정수 및 업무(제3조 관련)

□ 정수 현황

(단위: 명)

부 서 명	배치정수	부 서 명	배치정수	부 서 명	배치정수
세무1과	4	구포1동	6	덕천2동	5
세무2과	4	구포2동	7	덕천3동	6
민원봉사과	21	구포3동	7	만덕1동	5
토지정보과	1	금곡동	11	만덕2동	6
교통행정과	10	화명1동	6	만덕3동	5
건설과	1	화명2동	5	총 계	128
(구 예비)	3	화명3동	6		
보건소	3	덕천1동	6		

□ 지급대상 업무

부 서		담 당 업 무
구본청	세무1과	• 부동산 취득등록세 부과·징수
		• 지방세 제증명, 부동산·차량 압류해제
		• 체납차량번호판 영치
	세무2과	• 면허세, 자동차세, 차량취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징수
	민원봉사과	• 민원봉사과 소관업무
	토지정보과	• 부동산실거래 가격 신고
	교통행정과	• 화물자동차 인·허가
		• 이륜자동차 인·허가
		•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체납
		• 자동차 정기검사, 책임보험
		•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정리
		• 불법주정차단속에 관한 이의신청
	건설과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 건설기계사업 등록
보건소		• 민원접수
동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등록·주민등록·인감·제증명 발급 • <b>사회복지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업무</b>



■ 제·개정(폐지) 이유

특수업무수당 간 병급 가능(동수당+사회복지업무수당+민원수당)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직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 업무 및 정수 변경사항을 자치법규(훈령)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별표 정수현황 변경 : 구 전체(동 포함) 현행 91명 → 변경 128명(증37)

나. 별표 지급대상 업무 추가 : 사회복지관련 민원 접수 및 처리 업무